

국회 원 구성 협상 이번주 최대 고비… 17일 전 타결 주목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입장차 여전
민주 “국힘 몫 상임위도 조속히 구성”
국힘 내부서 입법 추진 견제 목소리도

여야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당부한 오는 17일까지 원 구성 완료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 구성이 되지 못한 ‘빈쪽 국회’가 지속될 경우 민주당은 일각의 입법 독주 비판에도 쟁점 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주가 여야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6월 말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통과와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 따라 배정된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회도 중요성이 큰 만큼, 조속히 원 구성을 완료해 민생·개혁 입법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다수당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을 맡고, 원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뤄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민주당이 연거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결국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등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를 선임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모두 불참하며 ‘빈쪽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 입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지연되자 원내지도

부가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본회의의 개최를 요청했다.

다만, 조 의장은 야당과 추가 협상을 요청했다. 이후 조 의장은 지난 8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양당이 신속하게 합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여야는 이번주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협상에 다시 나선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7곳인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배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경색된 국면이 풀리긴 쉽지 않을 거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수적 열세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원 구성에 참여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등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시도를 강하게 경고하는 등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실리론’도 관측된다. 이미

국회 법사위에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심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 전략과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안 추진 등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엔 권영세·김기현·나경 원·안철수 의원 등과 회의도 한다.

일각에선 상임위 교차 상태가 계속될 경우 입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20년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간 바 있다. 한정사상 첫 사례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에 “민주당은 민주당 몫으로 배분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 심사를 계속 할 것”이라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것은 민주당도 부담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李 내치 복귀… 부동산 대책·2기 내각 속도

15일부터 2차 정부부처 업무보고
23일 부동산 공개 토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 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몽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며 내치에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후속 조치를 점검하면서 오는 15~21일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23일엔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부동산 공개 토론회 등을 주재할 예정이다. 또 한 성숙 국무총리가 임명된 만큼 2기 내각 출범을 위해 일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11일) 밤 닷새 간의 나토·몽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선 유럽 국가와의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전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몽골에선 회토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등 핵심공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치에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는 2차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해 생중계 보고로 화제를 모았던

일명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 합성어)’가 시즌 2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번 2차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 대상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개 부,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 등 총 140개 공공기관이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엔 200명 규모의 국민참관단도 함께한다. 주관자인 국민이 직접 보고를 받는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부동산 종합대책도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토론회에선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전대 를 갈등 격화… 당권 구도 윤곽

선출 방식·청년 최고위원 논란

민주당이 이번주 당 대표 후보 선출 방식,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등 쟁점 사항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드러나며 내용이 깊어지는 가운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도 출사표를 속속 던져 선거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출 방식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보고한 ‘선호투표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회의 시작 40분 전에 취소되며 ‘전대 룰’과 관련한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일각에서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정청대 지도부가 잇박지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명심(이재명의 마음)을 강조하는 김 전 총리·송 의원과 정 전 대표가 대립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단 한번의 투표로 당 대표가 결정되는 선호투표가 정 전 대표 측에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시에 후보를 추려 2차 투표로 최종 당 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전준위가 도입하기로 한 청년최고위원제도 도입 전부터 논란의 목소리가 나온

다. 민주당이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전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제도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동일한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최고위원 구성에 따라 계파의 유불리가 갈리는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후보 등록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의 뜻을 품은 청년들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계파가 미치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일은 오는 16~17일이다.

/박태홍 기자

‘반짝 반등’ 국민의힘, 지지율 다시 내리막

전문가 진단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지지율 24% 지방선거 직후 29%서 연속 하락
징계 정치·계파 갈등 가장 큰 원인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깜짝 반등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모양새였지만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수 진영에서 비교적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거에서 이기며 기대를 모았으나, 장동혁 지도부의 ‘뺄셈 정치’가 다시 시작되며 지지율이 제자리리를 찾아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10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응답률은 9.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4%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주차 29%에서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민주당(42%)과의 격차는 18%포인트까지 다시 벌어졌다. 선거 직후 리얼미터 조사에서 44.3%를 기록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38.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셈이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은 반등과 하락의 원인을 각각 ‘반사이익’과 ‘집안싸움’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했다. 선거 국면의 반사이익과 오세훈·한동훈이라는 새 구심점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을 끌어올렸지만,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를 고리로 당내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모처럼 모였던 지지가 다시 흩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훈 정치평론가는 “6·3 지방선거 국면부터 반사적 이익을 보기 시작했다”며 “정청대 민주당 대표의 말실수와 강성 드라이브, 지선 직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

태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논란 등을 꼽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지지율이 반등했던 것은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기대만큼 못 했고 내부 분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사이보우’의 일시적 재등장으로 반등을 설명하는 분석도 나왔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직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한동훈과 오세훈이었고, 이들이 주목받자 ‘국민의힘도 바뀔 수 있다’고 본 사이보우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에 나섰다”며 “특히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올랐지만,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20%대에 머물렀던 것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무선 ARS 방식의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4.3%까지 올랐던 반면, 전화면접 방식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최고치가 29%에 그쳐 조사 방식 간 격차가 뚜렷했다.

전문가들은 하락세의 결정적 원인으로 장 대표가 주도하는 ‘징계 정치’와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지목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시간이 지나며 오세훈·한동훈 효과가 약화되고, 장동혁의 징계 정치 논란이 가열됐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중훈 평론가는 “선거 뒤에도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고 장 대표는 오히려 더 극우로 가고 있다”며 “한동훈·오세훈이 살아 돌아오자, 중도 보수가 그쪽을 지지하는데, 장 대표가 이들을 배척하고 친한계·비윤계 정계를 밀어붙이니 보수 진영 내 내분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